

동북아 3국의 협생(協生)을 향하여: 엘리제 조약의 변용을 통한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

박 창 건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동북아 3국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력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생(協生)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인식은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다. 여기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란 역내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합의된 규범, 규칙, 규약 등의 일반화된 원칙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공영의 우호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하부 지역 협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963년 1월, 유럽통합을 건인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독-프 우호조약' 일명 '엘리제 조약(Élysée Treaty)'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북아 3국 협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3국의 협생을 역사·영토와 정치 문제의 분리 접근에 의한 하부 지역 차원의 단위 분석으로 제도화된 우호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동북아 3국, 협생, 엘리제 조약, 제도화된 우호관계, 독일과 일본

* 본 논문은 2013년 1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최로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일본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한·중·일 3국 협력 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동북아 3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각국의 이해관계 다변화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력과 변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생(協生)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협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동북아 3국 협생을 정치사회동태적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인식은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다. 여기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란 역내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합의된 규범, 규칙, 규약 등의 일반화된 원칙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공영의 우호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하부-지역(sub-region)¹ 협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의 초점을 제도화된 우호관계의 틀이 상호 이해와 공동 변영을 위한 동북아 3국 협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맞추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국가 간 협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갈등과 대립,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동맹의 강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위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토문제 등이 대표적 저해 요인일 것이다. 특히 동북아 3국 협생을 저해하는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한 요인은 역사적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 갈등과 대립이다. 불행하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2013년 4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1. 후크(Hook)와 케어нс(Kearns)는 1999년에 출간한 *Subregionalism and World*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하부-지역 그룹들을 둘러싼 제도화의 변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하부-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다(Hook and Kearns, 1999). 그들의 연구는 하부-지역(sub-region)이 긍정적인 형태의 제도화된 협동을 촉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의 하부-지역이란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동남아시아(ASEAN 10개국)와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3개국)로 양분하여 하부-지역의 분석을 위한 단위로 정립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열린 문답에서 “침략의 정의를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발언을 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² 전후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피지배 관계로 인한,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의 잔재가 동북아 3국의 협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동북아 3국은 새로운 인식과 종래와 다른 발전적 이론과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협생의 길을 모색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종래와 같은 세력균형론적 접근만으로는 협생을 기반으로 한 지역통합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1963년 1월, 유럽통합을 견인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독-프 우호조약’ 일명 ‘엘리제 조약(Élysée Treaty)’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후(戰後) 독일과 프랑스의 발전은 유럽통합의 성공에 달려 있으며, 유럽의 협생은 엘리제 조약을 통한 양국의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엘리제 조약이 유럽의 협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도화된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공진(共進)하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화해(reconciliation) 노력은 현재의 동북아 3국의 협생을 위한 자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3국의 협생을 역사·영토와 정치 문제의 분리 접근에 의한 하부-지역 차원의 단위 분석으로 제도화된 우호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는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의 조어도와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고조된 국내의 불안 여론을 ‘전후 체제 탈피’라는 우경화 정책을 통해 잠식시키고, 지지세를 돌리는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The Washington Post* 2013/04/28).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II장에서는 동북아 3국 협력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전후인식 차이에 비추어 역사와 영토 문제를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유럽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제 조약의 특징과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동북아 3국의 협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V장에서는 전체적인 논점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제도화된 우호관계

2008년부터 정착된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이 협생의 길로 나아갈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생(協生)’이란 관점에서 동북아 3국의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동북아 지역 구상이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의 담론과 지역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Calder and Ye, 2010; Timmermann and Tsuchiyama, 2008; Park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첫째, 동북아 지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힘의 분포가 역내의 안정된 질서를 정착시켜 지역협력에 기여한다는 패권안정론(Rozman, 1998), 둘째, 지역 강대국이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책임대국론(Xia, 2001; 한석희, 2004; 毛利和子, 2006), 셋째, 역내의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추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협력국가를 지향하려는 균형국가론(Takahara, 2003; 문정인, 2005)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동북아 3국 협력관계의 변화 상황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논리를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협생이란 개념과 연계된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사례적 분석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3국이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협생의 길을 향해 자국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양보하는 정책 노선으로 제도화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중·일 3국이 각국의 위상과 이익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미래발전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 진전을 향한 긴밀한 정책적 공조와 협조를 통한 연대의 끈으로 이어져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宇野重昭, 2012: 352-356).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이 공유하는 민족주의적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화해의 역사와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닮은 독·프·폴 3국의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 3국의 협생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오랫동안 진행된 관계 변화이다(김준석, 2011). 지난 300여 년간 5번의 전쟁을 치르며 양국 간에 쌓인 적대 감정은 한국과 일본 혹은 중국과 일본의 적대 감정보다 훨씬 뿌리가 깊지만,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과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라는 정치 지도자에 의한 화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엘리제 조약이 체결되었고, 양국이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 역사와 전쟁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동북아 지역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은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힌트로 동북아 3국에게는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물론 전후 유럽의 역사·영토 문제를 풀어 나가는 협상의 표본을 낳는데 산과 역할을 한 엘리제 조약이 현재 동북아의 역사·영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으로써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존 논의는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찬성론자는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적 공감대와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엘리제 조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는 유럽과 동북아 사이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므로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

스의 특수한 사례일 뿐이며, 동북아 지역의 역사·영토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엘리제 조약의 협력 사례의 변용을 통해 동북아 3국 협생의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 나가는 분석의 틀로써 ‘제도화된 우호관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Haas, 1992). 여기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는 동북아 3국 협생으로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이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이다. 탈경계의 초국가적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난 동북아 지역의 역사 인식에 대한 마찰은 과거 회귀적인 패러다임에서는 탈피했지만 여전히 미래 지향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과 함께 형성된 각국의 집단기억으로 각인된 적대의식, 편견, 갈등 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현실에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상호 간에 화해되지 않은 채 상이한 역사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필두로,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집단기억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동북아 3국으로서는 엘리제 조약의 역사적 화해와 협력 접근 모델 중 독일-프랑스 그리고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일국사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교차 혹은 초국가적 역사 인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깊이 성찰하고 보편적 맥락에서 하나의 모델로 공유할 수 있는 ‘동북아 역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상대의 ‘국민화 과정’을 알고, 나아가 역사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에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현재’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다. 한·중·일 3국은 제조업 분야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 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공통점이 많아서 여타 지역 단위에 비해 협력 가능 분야가 많으며, 상호 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굴

레를 벗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리더십이 없었다면 양국 간 우호관계가 그렇게 빨리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엘리제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아데나워와 드골이 구상한 국가적 이해관계는 달랐지만 유럽통합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정치 지도자 역시 제로섬의 관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윈-윈(Win-Win)’의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협력 증진의 리더십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2011: 11-12).

셋째는 ‘미래’에 대한 통합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동북아 3국이 협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하부 지역 통합 레짐(sub-regional integration regime)’의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Park, 2009: 128-134). 엘리제 조약의 가장 핵심적 조항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정례적인 회합’을 갖는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양국 정상 사이의 만남이 제도화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 사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합의해 낼 수 있었고, 이는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있었던 의혹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한·중·일 3국의 지역통합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2008년 동북아 3국 정상 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2011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출범을 통해 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기본 틀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민간 간의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 정비,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산업, 관광, 환경, 문화, 교육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부터 동아시아의 하부 지역 통합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다(이창재 외, 2012: 33-65). 하지만 동북아 3국 정상회의의 실상은 역내의 갈등 요인이 급부상하면 대화채널이 일시 중단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당면하고 있는 역사·영토와 정치 문제를 분리시켜 접근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과거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관계사적 비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국내의 주요 사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고자 자국의 역사와 영토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국민화의 과정으로써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사와 영토 문제의 정치화 현상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명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Huntington, 1996).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은 마치 ‘게르만 문명권’과 ‘라틴 문명권’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로 비쳐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과정은 과거사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억이 정치화되고, 이렇게 정치화된 기억이 자국 중심의 일국사적 역사 교육과 맞물려서 물질적인 군비 확충 못지않게 국민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국민정서법’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중·일 3국은 역사교과서 문제, 신사참배 문제(高橋哲哉, 2005; Breen, 2008; Cheung, 2010), 영유권 문제, 강제동원자와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과 같은 쟁점이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갈등과 대립,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은 역사 문제로, 반면 일본은 영토 문제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식은 대중화된 일국사적 역사교육이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적대관계의 심화에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3국이 경험한 전쟁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전후 처리는 냉전과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 처리 방식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경험한 주변국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과거사 극복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는 한·중·일 3국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高橋哲哉, 1999).

주목할 사실은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독·프·폴 3국에서 유사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루스 베네틱트(Ruth Benedict)는 독일과 일본의 전후 인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독일의 ‘죄인 문화’와 일본의 ‘수치 문화’를 비교하여 양국의 전후 인식의 차이를 문화유형론으로 설명하였다(Benedict, 1989). 모치다 유키오(望田幸男)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양국이 겪은 점령체제의 차이, 경제 성장의 배경,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체험의 차이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 의식의 형성 등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 인식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栗屋憲太郎 외, 1994). 이원덕은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정책을 국제 비교론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규범적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이원덕, 2008).

우리가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관계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왜 독·프·폴과는 달리 한·중·일 간의 공동교과서 협의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와 영토 문제가 되풀이 되는 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일이다. 아마도 그 중심에는 각국의 다른 역사교육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교육이란 공동체의 주체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삶에 영향을 주고 올바른 생각과 이성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식, 판단, 능력 그리고 의지를 형성하는 도구이다(近藤孝弘 1998). 이런 맥락에서 역사교과서는 새로운 주권자에게 판단력 형성, 정치적

입장의 형성, 정치적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참여를 도와주는 여과작용을 통해 믿을 만한 준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교과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반목을 접고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폴란드가 화해 정책을 기반으로 ‘역사교과서 협의’를 통해 마음의 통합(integration of mind)을 실현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3국이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김세연, 2001: 17).

또한 게오르크-에커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Georg-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와 같은 민간연구소의 헌신적 노력이 유럽의 교과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산과 역할을 했다. 이는 교과서 협의를 위한 노력이 민간의 탈이데올로기적 새로운 세계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고, 나아가 동북아 3국보다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많은 유럽에서도 국민국가들 사이의 서로 다른 경험과 아픈 기억이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화해하지 않고서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는 힘들었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간의 역사교과서 협의³는 유럽공동체 논의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에 힘입어 ‘역사 단위로써의 유럽’이 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김유경, 2002: 382). 이러한 움직임은 탈국민국가적 공동교과서 운동이 국민국가 간의 정치적 평화와 화해운동이라는 과정과 동반되어 역사·영토 문제를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서 발전시킨 다층적 실천운동으로써 한·중·일 3국의 공동 역사교과서 논의에 훌륭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통해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적대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성공적으로 주도하

3. 주목할 것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교하여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교과서 협의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적대적 국가 간 역사교과서 협의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이 요구되었던 독일과 프랑스 대화 과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대화의 독립성 보장, 둘째, 역사 교육 목표가 국민의 정체성 확립보다 자국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점을 교육계와 일반 사회의 어느 정도 합의, 셋째, 대화를 담당하는 행위자들의 전문성과 지적 공동체의 규칙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승렬, 2008: 62-65).

고 있다.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첫째,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역사교육이 프랑스 혹은 폴란드와의 적대관계의 뿌리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했던 선각자들의 역할, 둘째, 이러한 선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해 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셋째, 독일 시민들의 자발적 각성에 의한 탈국가주의적 시민의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김승렬, 2003: 168). 이에 반해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 과거사를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역사교육을 자국 중심적 사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비록 일본 정부가 전쟁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 몇 차례 유감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주변 국가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어떤 일본 정치가도 1970년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거주 지역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와 같은 속죄의 제스처를 과거 식민지 국가에게 진심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후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이다(Togo, 2013).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힘있는 외교’를 외치는 전후 세대 보수 정치가들이 주류를 이루어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던 일본의 동북아 외교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수정, 자학사관 교육의 철폐, 근린제국 조항의 삭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선 “고노 담화를 긍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동아일보』, 2013/08/20). 또한 그는 아베 총리가 ‘전몰자 추도식’에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주변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아베 정권의 전후 인식에 대응하여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모여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임’을 결성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모임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주변국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다

시는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일본정부가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계승해 계속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모임의 공동대표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명예교수는 일본과 주변국들 사이에 깊게 파인 역사 인식의 골을 매워 나갈 수 있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발전시킬 것을 천명했다(『朝日新聞』, 2013/11/11).

이와 같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 인식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기억의 전쟁’을 종식시키며, 나아가 동북아 3국의 협생을 향한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의식과 정치적 도의의 차이를 환원시키는 국가 경계 안에 갇혀진 단순 비교를 뛰어넘는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독일의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을 단지 독일인의 건강한 역사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일본의 ‘망각적이고 불충분한’ 과거사 청산을 일본의 내재적 요인에서만 찾는 것 또한 문제의 본질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이진모, 2012: 247). 이러한 문제의 인식 하에서 전후 독일과 일본의 현대사에서 과거사 극복을 위해 각각 추진한 외교적 노력을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관계사적 측면과 비교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엘리제 조약에서 얻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길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유럽통합을 앞당긴 동력이자 전인차의 역할을 해왔다. 이 조약은 국제정치의 환경과 국내정치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그 자립적인 생명력에 영향을 주었지만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럽통합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가 해묵은 반목을 뒤로하고 역사적인 협생의 길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통합의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해 왔던 ‘독일-프랑스 커플’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된 엘리제 조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엘리제 조약으로 진전된 제도화된 네트워크가 어떻게 가동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3국 협생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의 엘리제 조약

미국의 유럽 재건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독일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환점이 되었다. 프랑스는 독일의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독일의 경제발전을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 틀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 5월 9일, 초국가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석탄과 철강의 생산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슈만 플랜(Schuman Plan)’⁴이 발표된 것은 이러한 프랑스의 변화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드골은 독일에 대한 이중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독 화해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드골의 구상은 독일이 나치즘과 전쟁의 도덕적·물질적 피해를 극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용인했지만 독일이 프랑스보다 도덕적·정치적으로 하위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경계 전략을 추구했다. 이것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전후 유럽질서의 재편 과정에 참여하면서 프랑스가 유럽 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전략적으로 필요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독일에 대한 저항감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아데나워는 독일을 유럽의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웃국가들과의 화해 정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독일에 대한 유럽인들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했고, 독일 내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재부흥이나 독일의 유럽 패권 재장악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했다. 이러한 아데나워의 화해정책은 유럽통

4. ‘슈만 플랜’의 핵심은 유럽통합과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이다.

합 과정에서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프랑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Bark and Gress, 1989: 431-432).

주목할 것은 양국 정상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정책의 비전이 서로 맞아 떨어져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은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드골과 아데나워가 단순한 정치적 관계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인 우정으로까지 발전할 정도로 긴밀하게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공유한 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엘리제 조약은 멀리는 1950년대 초반부터 한 걸음씩 진척되어 온 독일과 프랑스 간의 화해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가까이는 1962년 2월, ‘유럽 국가연합’의 창설을 논의한 ‘푸셰 플랜(Fouchet Plan)’의 실패에 따른 반작용의 결과이기도 했다.⁵ 아테나워는 NATO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드골의 복안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독일이 프랑스와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유럽통합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드골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통합에 대한 구상이 드골과 아테나워 사이의 밀월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2년 7월, 드골의 초청을 받은 아테나워는 1주일간 프랑스를 공식 순방했다. 아테나워는 프랑스의 유서 깊은 성지 랭스(Reims)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돌며 양국의 우의를 다졌으며, 드골과 함께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함께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기도 했다. 이는 두 나라의 공식 화해를 앞둔 대국민 홍보전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같은 맥락에서 1962년 9월에는 드골이 1주일간 독일을 순방하였다. 드골은 위대한 독일 민족을 치켜세우면서 ‘화해·우애·공영’의 기치를 내걸었다. 드골은 아테나워가 1962년에 퇴임할 때까지 무려 40여 차례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대화 채널을 한층 발전시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양국 지도자들의 노력은 독일과 프랑스가 해묵은 반목을 뒤로하고 화해의 길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63년 1월 22일, 서독의 콘라트

5. ‘푸셰 플랜’은 유럽 6개국이 공동 정치기구의 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각국 정상 또는 각료들 사이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국방 등의 현안을 논의할 정부 간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유럽국가연합을 창설하자는 제안이었다(이용재, 2008: 207-209).

아데나워 총리와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독일-프랑스 우호조약’ 일명 ‘엘리제 조약(Élysée Treaty)’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엘리제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침을 주며, 1년에 2번씩 정례 회합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회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둘째, 외무부장관들은 계획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적어도 3개월에 1번의 회합을 갖는다. 셋째, 국방, 교육, 청소년 문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책임자들은 정례적인 회합을 가지며, 이 회합은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기구들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 넷째, 양국의 부처 간 위원회는 여러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조정할 책임을 지며, 외무부 고위 공직자에 의해 주재되고, 모든 관련 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⁶

하지만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 안팎의 불협화음이 동반된 상태에서 탄생되었으므로 그 추진 동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도 했다. 1963년 10월, 아데나워가 퇴진하고, 친영파로 분류되는 에르하르트(Ludwig Erhard)가 수상에 오르면서, 독일은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유럽주의(Europeanism)’에서 미국과 영국의 협력을 중시하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로 외교정책을 수정하여 채택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련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독일의 국내정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엘리제 조약의 화해가 갖는 역사적 의의보다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미국은 독일이 프랑스의 유럽주의에 함몰될 것을 우려해 서독 꺼이기 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 핵무기(MLF: Multilateral Forces)’ 제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Schlesinger, 1965: 872-875). 이에 에르하르트 수상은 엘리제 조약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임자인 아데나워의 유럽 구상과는 선을 긋는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에르하르트의 외교 노선은 줄곧 드골의 유럽주의와 엇박자를 낳는 불협화음을 초래하였다. 결국 1964년 7월 23일에 가진 언론담화에서 드골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첨예

6.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864(검색일: 2013/11/19).

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인 연대'도 없다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엘리제 조약의 추진 동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화된 우호관계는 유럽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반하지 않고 달려왔다. 비록 1960년대에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독일과 프랑스 협력 관계의 약화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이어졌지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는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양국의 제도화된 우호관계는 다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쟁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유럽연합(EU)을 탄생시킴과 동시에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의 근간에는 양국 연대의 끈이었던 엘리제 조약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일 양국이나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일본 정부의 과거사의 사과와 김대중 정부의 미래비전 공동선언, 2000년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 및 사무국 개설 등 동북아 3국의 역사적 화해 협력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서 현재 동북아 3국의 역사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맺게 된 독일과 프랑스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동북아 3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엘리제 조약을 통해 해묵은 반목을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낸 양국의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엘리제 조약으로 진전된 제도화된 네트워크

독일과 프랑스 정상 간의 정례적인 회합이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더십 교체와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양국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크리

스토퍼 휴즈(Christopher W. Hughes, 2008)와 캐롤라인 로즈(Caroline Rose, 2008)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역사인식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제도화된 우호관계가 정상회담 몇 번과 그 결과인 상징적인 정책들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정적으로 협생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제 조약을 보다 견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켰기 때문이다(Webber, 1999).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실제로 양국 정부가 하위 수준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동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엘리제 조약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정착시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논의를 개진했다. 이들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독-프 양국은 관련 조항을 보장하여 2차례의 정치적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네트워크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Kcos, 1995). 1982년 2월, 제39차 정상회의에서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독일 총리와 프랑슈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은 독-프 안전보장위원회(The German-Franco Commission for Security and Defense)를 최초로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독일의 국내정치 변화에 따라 슈미트의 정치적 계승자인 헬무트 콜(Helmut Kohl)이 독일 총리에 취임하였고, 미테랑과 콜의 협력적 리더십은 독-프 안전보장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착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국방·외교 장관들과 함께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안전보장위원회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상설화된 워킹 그룹(Working Groups)의 창설을 1982년 10월, 제40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다. 이 워킹 그룹은 독-프 양국의 관련 장관들이 대표가 되어 전략 무기 감축, 군비 협력, 군사 협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Krotz, 2002: 15). 안보, 방위, 군축 영역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한 양국의 노력은 1988년 1월 22일, 엘리제 조약 25주년을 맞이하여 독-프 안전보장위원회가 독-프 안전보장회의(The German-Franco Council for Defense and Security)로 확대·통합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양국은 기존의 워킹 그룹

의 기능을 조정하고, 우주 공간 정찰, 군비 정책, 법과 계약 등의 분야를 다루는 새로운 워킹 그룹을 신설하여 독-프 안전보장회의의 추진 체계를 포괄적 형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로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독-프 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을 파리(Paris)에 두고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자를 상주시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엘리제 조약에서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공조 조항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와 재정 장관들은 농업, 에너지, 운송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논의를 위해 양국의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화된 대화 채널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회합은 양국의 경제와 금융 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로서, 1987년 11월 12~13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개최된 제15차 정상회의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을 위한 몇 개의 다른 대화 채널과 함께 독-프 경제·재정회의(The German-Franco Council for Economics and Finance)라는 명실상부한 제도화된 독립적 네트워크로 출범하게 되었다. 양국 의회는 독-프 경제·재정회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관련 합의 조항에 승인하였고, 이는 엘리제 조약 의정서의 일부로 정착시키는 기틀이 되었다. 독-프 경제·재정회의는 양국의 경제, 재정,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장관과 은행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Paris)에 사무국을 두고, 매년 4차례의 정례화된 회합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채택하여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있다. 독-프 경제·재정회의의 주요 목적은 유럽의 경제와 재정 위기가 촉발되면 양국 정부가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지역협력으로 안정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회의는 무역 불균형, 관세, 환경 정책 등과 같은 양국 간의 불균형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인 특별위원회도 설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수렴 과정은 적어도 유럽통합의 중요한 몇몇 전환국면에서도 엘리제 조약의 정신이 계승되어 기능적 접근을 중시하는 제도화된 네트워크로 발전되었다. 주목할 것은 독-프 경제·재정회의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채택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을 탄생시킨 동력이자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Baun, 1996). 이 점은 독-프 양국 정부 간 경제·재정 분야의

특별한 정책 공조가 유럽 단일 화폐의 채택과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이라는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한 획을 그은 제도적 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엘리제 조약에서 교육·문화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양국 사람들의 교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양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 모임을 3개월마다, 가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모임을 2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채널의 의무화는 양국 간 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협력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엘리제 조약에서 교육·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교류를 촉진시키는 기구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점이다. 이를 위해 1963년 7월 5일, 양국 정부의 공동 출자를 통해 독-프 청소년 교류 사무국을 설립하기 위한 조약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29일, 독일의 바트 혼네프(Bad Honnef)와 10월 9일, 프랑스의 꺾브랑니(Quai Branly)에 독-프 청소년 교류 사무국이 각각 설치되었다. 이 사무국은 확대된 유럽의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 사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지속적인 접촉과 활발한 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988년 1월 22일, 양국의 외무부 장관은 독-프 문화회의(The German-Franco Cultural Council)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의 이러한 결정은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문화 교류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독-프 문화회의는 매년 2회의 정례화된 모임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협력적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이 회의는 양국 정부가 하위 수준에서의 문화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연방주(Länder)와 프랑스의 광역지방(Région)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995~96년에 펼쳐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와 프랑스의 낭트(Nantes) 간의 문화 교류는 현대 음악, 재즈, 회화 분야 등에 종사하는 젊은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과 유럽 공동의 역사와 기억을 주제로 기획된 젊은 출판인들과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Krotz, 2002:

21).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은 교육·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이 점에서 독·프 문화회의는 양국 간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엘리제 조약으로부터 얻은 협생의 교훈

이상으로 살펴본 엘리제 조약은 냉전의 구조적 문제로 순탄하지 못한 출발과 독일과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반발과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양국 정부가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여러 영역에서 진척시켰다는 사실을 통해 엘리제 조약이 유럽 협생의 길을 견인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제 조약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교훈으로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식민지 역사와 전쟁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매끄럽지 못한 전후 인식과 처리 과정이 역내의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는 외교적 형태를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과 견주어볼 때, 독·프 우호조약인 엘리제 조약은 동북아 3국이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제 조약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동북아 3국의 협생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정치적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Park, 2006: 101). 비록 동북아 3국은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가 제도화된 대화 채널로 존재하고 있지만 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마비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례 회합을 통해 쟁점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존하고 있는 동북아 3국 대화 채널의 효용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엘리제 조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은 동북아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정책적 공조와 협조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대화 채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박창진, 2011: 42). 또한 정상회의와 관련 장관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인 의장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최 시기도 장관급회의와 정상회의를 연계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협생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 탱크’로서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리더십과 조직이 있더라도 사업을 구상할 때 비전이 없으면 협생의 길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과거의 양극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학자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사교과서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3국에서도 ‘협생의 길’이라는 비전의 설정 하에 학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2013년 10월 22일, 와세다 대학의 모리 카즈코(毛里和子)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발족한 ‘새로운 중일관계를 생각하는 연구자 모임(新しい日中關係を考える研究者の会)’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 3국 협생의 중요성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모리 카즈코(毛里和子) 교수와의 인터뷰, 2013/12/13).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 1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일본연구소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협력 연구회’는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한층 발전시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동북아 3국 협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 간의 심도 깊은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동북아 3국이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경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五白旗頭眞, 1999).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경쟁관계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예컨대 한·중·일 3국의 지역협의체 구상은 2015년 ASEAN 공동체 설립 이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시 여러 가지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

중·일 FTA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 3국이 발전적이며 협조적인 경쟁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 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는 채권 발행자(기업)와 투자자가 실제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외환 관리 및 국제 자본 거래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 금융시장의 장기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의 발전적이며 협조적인 경쟁관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교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통합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중요 배경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가동된 ‘에라무스 프로젝트(Erasmus Project)’였다(Feyen and Krzaklewska, 2013). 이것은 유럽 각국의 대학 간의 학점 교환 프로젝트로 유럽적인 시야를 가진 젊은 지도층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교류를 통해 적대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엘리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교류 사무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흥미롭게도 2008년 5월,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라무스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9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캠퍼스 아시아’ 구상이 논의되었다. 이 구상은 2010년 봄, 3개국 대학, 산업 및 행정 관계자가 도쿄(東京)에 모여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청소년들은 주변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익히고, 이해하면서 동북아 공동체의 컨센서스 형성에 구심적인 동력이 되어 동북아 3국 협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어떤 역사 서술이나 해석도 정치 현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역사를 단 한 가지 입장이나 관점에서 파악하고,

단 한 가지 해석의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인식을 통해 자기 비판과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이나 식민 지배가 초래한 희생과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에서 일본의 전후 인식 양상은 독일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단절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에 관련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전후 인식 차이로 인해 파생된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집단기억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독일의 과거사 문제의 처리와 반성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엘리제 조약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유럽 구상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국민 여론의 변덕스러움은 엘리제 조약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두 국가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엘리제 조약을 제도화된 우호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엘리제 조약이 유럽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듯이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동북아 3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협생의 활성화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일시적으로나마 양보하는 정책의 공조와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동북아 3국은 당면하고 있는 역사·영토 문제를 정치 문제와 분리하여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협생의 담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냉전의 모순 구조 위에 구제국주의 국가와 구식민지 국가 간의 갈등과 모순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 동북아 지역의 역사·영토 문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동북아 지역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불개입 입장을 취했던 미국이 개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는 2007년, 미국 하원 결의안에서 태평양 전쟁과 중군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힘입은 바 크지만, 일본의 과거 지향적 움직임이 동북아 안정과 다른 동맹국과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귀

환이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대외관계의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펴고 있다(박건영, 2013).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와 전통적 동맹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Steinberg and O’ Hanlon, 2014). 특히 2010년 조어도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위협을 실감한 일본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환영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적으로 ‘보통 국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어쩔 수 없는 현실주의(reluctant realism)’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을 기반으로 지역 경계의 가변성과 신축성에 따라 자기중심적 협생의 담론으로,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Green, 2001). 예컨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일본판 NSC의 창설,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의 가동 등 일련의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수정 움직임으로 우경화가 입증되고 있다. 우경화의 길로 내딛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역사와 전쟁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계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은 공진(共進)의 견지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4-03-30 심사일자: 2014-07-02 게재확정: 2014-08-10

참고문헌

- 김승렬. 2003. “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제49집. pp. 139-170.
- _____. 2008. “독일·폴란드의 국경 분쟁과 역사 분쟁: 슬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김승렬·박용희·문수현·이용재·김종범·최재희·민정현.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 29-97.

- 김세연. 2001.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방 연합국에 의한 독일의 전후처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1호. pp. 1-24.
- 김유경. 2002.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 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비평』 59호. pp. 363-385.
- 김준석. 2011. “프랑스-독일 관계의 변화와 유럽통합: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연구』 제20집 3호. pp. 287-310.
- 문정인. 2005. “동북아균형자론의 갈길, 동북아균형자론,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예방적 외교라면...” 『넥스트』 6월호. pp. 2-35.
- 박건영. 2013. “오바마의 주판과 긴 파장?: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3호. pp. 1-47.
- 박창건. 2011.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상황적 하부지역주의.” 『일본연구논총』 제34호. pp. 31-53.
- 이용재. 2008. “엘리제조약을 위하여: 유럽통합과 독일-프랑스 화해의 셋길.” 『프랑스사연구』 제19호. pp. 191-224.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8.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국제 비교의 관점.” 『동북아역사논총』 제22호. pp. 7-36.
- 이진모. 2012. “두 개의 전후: 서독과 일본의 과거사 극복 재조명.” 『역사와 경제』 제82호. pp. 243-269.
- 이창재·방호경·나승권·이보람. 2012. 『한·중·일 경제협업체 구상』.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 이희옥. 2007.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 폴리테리아.
-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2011.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안: 공생을 위한 북할 네트워크의 구축』. 서울: 한울.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pp. 191-210.
- Bark, Dennis L. and David R. Gress. 1989. *From Shadow to Substance 1945-1963*. Cambridge: Basil Blackwell.
- Baun, Michael J. 1996. *An Imperfect Union: The Maastricht Treaty and New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Boulder: Westview Press.
- Benedict, Ruth. 1989.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 Mass.: Houghton Mifflin.
- Breen, John. (Ed.) 2008. *Yasukuni, the War Dead and the Struggle for Japan's Past*. New York: Hurst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lder, Kent and Min Ye. 2010.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eung, Mong. 2010. “Political survival and the Yasukuni controversy in Sino-Japanese relations.” *The Pacific Review*, 23(4): 527-548.
- Feyen, Benjamin and Ewa Krzaklewska. (Eds.) 2013. *The Erasmus Phenomenon: Symbol of a New European Gener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 Green, Michael J. 2001.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New York: Palgrave.
- Haas, Peter M.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 Peter M. Haas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London: Reaktion Books.
- Hook, Glenn D. and Ian Kearns (Eds.). 1999. *Subregionalism and World Order*. London: Macmillan.
- Hughes, Christopher W. 2008. "Japan's policy towards China: domestic structural change, globalization, history and nationalism." In Christopher Dent (Ed.), *China, Japan and regional leadership in East Asia*. Cheltenham: Edward Elgar, pp. 37-51.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 Kocs, Stephen A. 1995. *Autonomy or Power? The Franco-German Relationship and Europe's Strategic Choices, 1955-1995*. Baden-Baden, Germany: Nomos.
- Koo, Min-Gyo. 2009. "The Senkaku/Diaoyu dispute and Sino-Japanese political-economic relations: cold politics and hot economics?" *The Pacific Review*, 22(2): 205-232.
- Krotz, Ulrich. 2002. "Structure as process: the regularized intergovernmentalism of Franco-German bilateralism." Program for the Study of Germany and Europe Working Paper No. 02.3.
- Park, Chang-Gun. 2006. "Japan's leadership shifts: from the East Asian crisis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3 Summit." *International Area Review*, 9(1): 87-109.
- _____. 2009. "Explaining the dimensions of neo-regionalism in East Asia: a Japanese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7(2): 111-140.
- Park, Jehoon, T.J. Pempel, and Gérard Roland. (Eds.) 2008.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Political Conflict and Economic integration*. Cheltenham and MA: Edward Elgar.
- Rozman, Gilbert. 1998. "Flawed regionalism: Reconceptualizing Northeast Asia in the 1990s." *Pacific Review*, 11(1): 1-27.
- Rose, Caroline. 2008. "Sino-Japanese relations after Koizumi and the limits of 'new ear' diplomacy." In Christopher Dent (Ed.), *China, Japan and regional leadership in East Asia*. Cheltenham: Edward Elgar: 52-64.
- Steinberg, James and Michael E. O' Hanlon. 2014.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kahara, Akio. 2003. "Japan and China: new regionalism and the emerging East Asian order." In Hugo Dobson and Glenn D. Hook (Eds.), *Japan and Britain*

- in the Contemporary World: Responses to Common Issu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39.
- Timmermann, Martina and Jitsuo Tsuchiyama (Eds.). 2008.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 Step towards Global Governance*. Tokyo and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Togo, Kazuhiko (Ed.). 2013.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war Asia: The Murayama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ebber, Douglas (Ed.). 1999. *The Franco-German Relationship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Xia, Liping. 2001. "China: a responsible great powe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6): 17-25.
- 五白旗頭眞. 1999. 「冷戦後の日本外交とリーダーシップ」『国際問題』, 3月号.
- 毛利和子. 2006. 『日中関係: 戦後から新時代へ』. 東京: 岩波書店.
- 宇野重昭. 2012. 『北東アジア学への道』. 東京: 国際書院.
- 進藤栄一. 2013. 『アジア力の世紀』. 東京: 岩波書店.
- 高橋哲哉. 1999. 『戦後責任論』. 東京: 講談社.
- _____. 2005. 『靖国問題』. 東京: ちくま新書.
- 栗屋憲太郎・三島憲一・望田幸男・田中宏・広渡清吾・山口定. 1994. 『戦争責任・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東京: 朝日新聞出版社.
- 近藤孝弘. 1998. 『国際歴史教科書対話: ヨーロッパにおける「過去」の再編』, 東京: 中央公論社.

Toward the ‘Co-existence’ of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ized Friendly Relation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Elysee Treaty

Chang-Gun Par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seek co-existence in which cooperation and prosperity proceed, before conflict and antagonism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process of seeking the path of co-existence, it can be seen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nstitutionalized friendly relations. Institutionalized friendly relations in this paper means the sub-regional cooperation agreed norms, rules and conventions and the values shared by countries in the region that fix institutionally friendly relations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developed based on faith and sincerity.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tries to seek the path of co-existence through lesson that we can learn from ‘Elysee Treaty’ signed ‘Germany-France treaty of friendship’ which brought European integration in January, 1963. Above all, this research proposes an approach in order to develop co-existence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stitutionalized friendly relations’ as the units of analysis of sub-regional dimension by separating history, territory and political problems.

Keywords: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Co-living, Élysée Treaty,
Institutionalized friendly relations, Germany and Japan